

규제 개혁

철저한 구조적 개혁, 새로운 성장의 원동력

1990년대 초 거품 경제가 꺼지면서 경제 침체를 겪은 일본은 성장을 위한 원동력으로서 법규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부는 일본의 경제와 사회 및 정부와 관련된 법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일련의 광범위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예상보다 급속하게 진행되는 인구의 고령화와, 환경 문제의 악화, 정보 기술 혁명이 가속화되고 경제의 세계화에 기인한 산업 구조의 발전 등, 2000년대 초 사회와 경제 환경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근본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혁의 필요성이 더욱더 강조되었다.

1995년 정부는 이하 11가지 분야에 대해 1,091건의 규제 완화를 포함한 규제 완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①토지와 주거, ②정보통신, ③유통, ④운송, ⑤기준, 인가 및 수입, ⑥금융, 보증 및 보험, ⑦에너지, ⑧고용 및 노동, ⑨오염, 폐기물 및 환경 보호, ⑩위험물질 및 재해 방지, 공공 안전, ⑪그 외 분야이다. 이 계획은 1996년과 1997년에 개정되었으며 이후의 개정안에는 12번째로 교육 및 유아 분야가 추가되어 총 2,823건이 되었다.

1995년 계획 진행 기간이 만료되자, 정부는 1998년에 이전의 계획 중 아직 실행되지 않은 법령들과 새로운 법령을 포함한 규제 완화 추진을 위한 3개년 계획을 실시하였다. 3개년 계획의 목표는 국제 사회에 대해 개방적이며 자율적인 책임과 시장 원칙에 근거한 자유롭고 공정한 사회 및 경제적 구조를 조성하는 것이다. 또한, 행정부의 역할을 사전 규제로부터 일반적인 규칙에 순응하는지를 알아보는 사후감시로 바뀌기 위해, 일본 사회와 경제를 철저히 구조적으로 개혁해 나가는 것이었다. 경제 정책, 보건 의료와 복지, 법률의 3가지 분야가 이전의 12가지 분야의 규제 완화 계획에 추가되어 총 624개의 항목이 정의되었다. 이



우체국

2007년 우정사업 민영화에 따라, 일본우정그룹이 탄생했다.

3개년 계획은 1999년과 2000년에 개정되었다.

2001년 3월, 정부는 이전 계획에서 사용된 '규제 완화'라는 문구를 '규제 개혁'으로 교체하여 규제 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3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법, 금융, 교육, 의료, 고용, 유통 및 에너지를 포함한 15가지 분야 554개의 규제 개혁 항목을 다루었다. 또한, 정보 기술, 환경, 경쟁력, 기준 증명 및 자격 구조와 같은 사항들을 다루는 104개의 교차

개혁 항목을 포함하였다.

2001년 4월부터 3년 동안, 수상의 고문 기관 역할을 담당하는 내각의 한 부분으로서 규제 개혁 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위원회가 처음으로 준비한 2개 보고서는 2002년과 2003년 3개년 계획에 적용되는 개정을 위한 기준의 역할을 하였다. 2002년 개정안은 의료, 사회복지 및 육아, 고용, 교육, 환경 및 도심 재개발의 6가지 분야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2003년 개정안은 구조적인 개혁을 위해 특별 영역을 설정하고 사용 최적화에 대한 촉진을 새로이 강조하였다. 2003년 12월에 발표한 위원회의 마지막 보고서에서는 과거 개혁을 위한 노력의 결과를 요약하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정리하였다. 2004년 이후, 일본 정부의 규제개혁 논의는, 규제개혁·민간개방 추진 회의(2004-2007년), 규제개혁회의(2007-2010년)로 이어졌고, 2010년 3월부터는 행정 쇠퇴회의에 설치된 규제·제도개혁에 관한 분과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새 규제개혁위원회는 2013년에 설립되었으며 2016년 규제개혁 촉진위원회가 이를 승계하였다.

구조적인 개혁을 위한 특별 지역

구조적인 개혁을 실시하는 특별 지역은 특별히 선정된 지역이다. 지역적 특성에 맞추어 규제 예외 사항을 적용한 결과,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전국적인 규모로는 금지된 활동들을 특별 지역에서는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활동 계획은 지방 자치 단체와 민간 기업들의 주도로 준비될 것이었다. 이 영역의 목표는 규제 완화를 통하여 지역 경제와 민간 기업들을 소생시키고 이후 전국적인 규모로 실행 가능성이 있는 구조적인 개혁의 성공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었다. 구조적 개혁을 위한 특별 지역 법안이 2002년 12월에 통과되어 2003년 4월부터 효력을 발휘하였다. 2016년 11월 현재, 정부는 총 1,280 곳의 이러한 구조개혁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민간 기업들이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특별 교육 지역, 민간 기업이 농업에 참여할 수 있는 특별 농업 지역 및 외국 연구자들에 대한 비자 법규가 완화된 국제 교류 지역이 포함되었다.

휴대전화
싼 요금과 다양한 서비스로 휴대 전화가 많이 팔리고 있다.

통신과 방송

데이터 통신 분야에서의 규제 개혁은 1985년 가장 큰 국내 통신 회사인 일본 전신 전화 회사(NTT)의 민영화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이후 설립된 새로운 일반 통신 회사들은 장거리 통신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기술적인 혁신과 함께 일반 통신 회사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전화료가 많이 내렸다.

휴대전화 사용은 지난 20년 동안 눈부시게 성장하였다. 송수화기 대여 시스템은 1994년 완전 판매로 전환되었고 1995년 새로운 서비스 요금 계획 도입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규제가 완화되었으며, 1998년에는 휴대전화 사용 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신청 요금을 인하하였다. 그러한 규제에 힘입어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1994년 3월, 213만 명에서 2017년 6월에는 1억 6720만 명에 달하고 있다.

1997년 규제 완화 정책의 결과로, NTT는 국제 전화 시장에 진출하게 되었으며 주요 국제 통신 회사인 국제 전신 전화(KDD)가 국내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 규칙들은 네트워크 연결을 위해 폐지되었고 공공-민간-공공 라인 연결 금지도 폐지되었다. 1998년, NTT와 KDD를 제외한 주요 통신 회사의 외국인 소유와 관련된 규제도 폐지되었다. 1999년 7월 NTT는 일본 전신 전화 동부 회사와 일본 전신 전화 서부 회사의 2개 지역 회사와 하나의 장거리 회사로 분리되었다. 규제 완화로 인한 치열한 경쟁으로 산업 개편이 촉진되었다. 일례로 2000년 10월 KDD와 2개의 일반 통신 회사를 합병하여 KDDI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통신 산업의 규제 완화로 인한 사업 및 개인 통신용 인터넷 사용 증가는 또 다른 발전을 가져왔다. 2016년 3월 현재 인터넷 사용자 수는 1억 0084만 명에 달한다. 또한 세대당 초고속 브로드밴드(다운스트림이 30Mbps로 제한된 FTTH 제외) 접속률은 99.98%이다. 광케이블 브로드밴드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광케이블 이용률도 75.7%로 증가했다.

1999년의 방송법 개정안으로 데이터가 프로그램의 이미지 또는 음성 콘텐츠와는



관계없이 모두 디지털 신호의 일부로,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를 방송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텔레비전과 라디오 디지털 방송이 2003년부터 2006년에 걸쳐 점차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여, 2011년 7월, 방송위성을 통해 아날로그 방식으로 방송되던 '아날로그 TV 방송'이 종료되고 디지털 방송으로 일원화되었다. 이에 따라 고해상도의 텔레비전 방송(하이비전 방송)과 5.1ch 서라운드 방송 등 고품질의 영상·음성 서비스, 데이터 방송이 가능해졌다.

금융

'자유, 공정, 세계화'라는 개념을 기초로 일본 정부는 이른바 '빅뱅'이라 불리는 금융 시장의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 분야의 규제 개혁은 일본의 민간 투자자들의 참여 촉진을 목표로 하였다. 증권 거래법 개정안은 은행, 증권 및 보험 분야의 장벽을 제거하였고 그 결과 증권 시장의 선호도와 경쟁력 및 활력을 불러일으켰다. 기업에 대한 규제는 폐지되었고 증권 회사와 은행의 사업 분야도 확대되었다.

1998년 4월 효력이 발생한 외환 규제법 개정안으로 외환은 완전히 자유화되었다. 이 개정안으로 기업과 개인이 외국계 회사와 자유롭게 거래하고 송금할 수 있게 되었다. 1998년 12월에는 주식 수수료와 생명 보험 외 보험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장외 증권 금융 파생 상품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였으며, 은행의 투자 신탁 상품 판매를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된 일련의 금융 구조 개혁법이 시행되었다. 2001년 이후 시행된 규제 개혁 정책들로 인해 은행들은 다양한 보험 상품들을 장외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외 사항

유통 산업: 소규모 독립 소매점을 보호하는 대규모 소매점 법이 1974년에 통과되었다. 1990년대에 시행된 3번의 개정으로 규제

조치가 완화되었다. 1989년 794개였던 대형 상점의 수가 1990년에는 1,667개로 대폭 증가하였고 1996년에는 2,269개로 최고치에 다다랐다. 주거 환경 보존을 위한 대규모 소매점법 관련 정책이 1998년에 법제화되고 2000년에 대규모 소매점 법으로 대체되면서 효력이 발생되었다. 새로운 법률은 기존의 소규모 상점들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지방의 주거 환경을 보호하는 쪽으로 초점이 바뀌었다.

1996년에는 쌀 판매를 규제하는 방법이 제한 허가제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등록제로 바뀌었고 1999년에는 등록 절차도 보다 간소화되었다. 2003년에는 주류 판매 허가를 다루는 규정들도 상당히 완화되었으며, 2000년에는 해당 인구와 거리 기준도 해지되었다. 종래의 일반 의약품은 약제사가 근무하는 인가된 약국에서만 판매하였으나, 1999년에 그때까지 의약품으로 지정되었던 비타민제 등이 의약부외품으로 지정되어, 약국 이외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또 2009년부터는 위험성이 낮은 의약품을 등록판매자가 판매할 수 있게 되어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도 취급이 확대되고 있다. 1998년 주유소에서 자가 주유도 허용되었다.

운송: 국내 항공업에 대한 규제, 특히 수요와 공급 조절과 관련한 규제가 개정되었다. 1997년 4월에는 항공사 간의 경쟁 촉진을 위해 2중, 3중 활주로에 관한 규제가 폐지되었다. 또한, 1997년에는 하네다 공항에 새로운 활주로를 만들어지면서 이착륙 장소가 증가하여 새로운 항공사들이 승객을 수송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1998년 스카이마크 항공사와 에어 두의 새로운 2개 항공사가 비행을 시작하였다. 2000년 이후에는 항공사들이 자율적으로 운임을 결정할 수 있게 되어 다양한 할인 요금과 함께 전체적으로 항공료가 인하되었다. 2012년에는 국내의 저가항공사(LCC) 3개 사가 운항을 시작해 국내외 여행이 보다 저렴하고 편리해졌다.

토지와 주거: 고층 주거용 건물에 대한 용적 비율이 증가하였다. 분양 아파트의 면적을 계산할 때에 포함되던 공공 계단과 홀의 용적이 항목에서 빠지게 되었다. 이 계산법은 사실상



도쿄 증권거래소

주거 공간의 사용 면적을 증가시켰다. 1998년 개정된 건축 기준법에 따라, 지정된 민간 조직이 지방 자치 단체가 실시하는 건축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

의료와 복지: 고령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영리 및 비영리 포함)를 민간에서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허가 정책이 시행되었다. 과거 일본은 공공 서비스가 지배적이었다. 약품의 공식적인 가격 결정 제도도 개선되었다. 2000년 이후, 지방 자치 단체와 사회 복지 법인에서만 운영하던 보육 시설을 민간 기업에서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교육: 2000년에 시행된 규제 개혁으로, 교육 분야에서의 근무 경험이나 교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공립 학교의 교장이 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로, 민간 분야에서 광범위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노하우를 공립학교 시스템에 이용할 수가 있게 되었다. 연이은 개혁으로 사립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설립 조건이 완화되었고, 일본 소재 국제 고등학교와 민족 고등학교의 졸업생들이 국립 대학교의 입학 시험에 예전보다 손쉽게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

여행: 일본의 외국 여행자 증가로 인한 숙박 부족을 해결하는 동시에 여행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민박”(개인의 집과 방을 빌리는 제도)을 관리하는 법을 제정하려는 몇몇 움직임이 있었다. 2016년 봄 당시 호텔사업법의 일부 규제를 완화하여 특별 지역에서 민박이 허용되었다.